

박대통령 “대구 軍·민간공항 통합 이전 조속 추진” 주문

광주 軍·민간공항 이전도 급물살 타나

市, 지난달 ‘군공항 이전 건의안’ 국방부 제출

광주공항-무안공항 통합 논의 탄력 받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지역별 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면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구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이 추진될 경우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

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정됐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현재 군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지난달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탈락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함께 보류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진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러한 대구공항의 통합이전 방식은 군사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구시의 입

장을 지지했다.

박 대통령은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가 있도록 추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하여는 대통령의 첫 언급으로 보인다”며 “확대해석은 경계해야겠지만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군 공항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광주시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민간)공항과의 통합이 절실한 전남도가 이를 어떻게 해석해 논의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광주시는 일단 지난달 광주 군 공항 이

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국방부 민간위원 자문을 받은 뒤 수정·보완을 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안’을 국방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규모는 463만평(군 기지 353만평·소음 완충지역 110만평)이다. 이전 사업비로는 기지 건설비로 3조8000억원, 개발 비용 1조8000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비로 4000억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군 공항을 2022년까지 옮기고 그 자리에는 2025년까지 신도시인 가칭 솔마루시티를 조성하기로 하고 로드맵을 마련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8월 광주전남 연구원이 제2차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에 따라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광복절 특사 정·재계 인사 포함 관심

박대통령, 공식 천명

김승연·이재현·최재원 등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연속 8·15 광복절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그 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결정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일단 올해 사면도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형사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권 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완전히 배제했고, 작년 광복 70주년 특사에서는 주요 경제인 14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14명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에 불과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면에 대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무더기로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경제적 위기’를 거론한 만큼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참모진에 사면 준비를 지시하면서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재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G넥스원 부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인 사면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해왔고 특히 정치인에 대해선 예외없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도 이같은 원칙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 출범 이후 통합의 정치를 강조해온 만큼 요건이 된다면 야당 쪽 인사가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특조위

내달 23~24일 3차 청문회

정부 활동 종료 선언... 개최 미지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달 23~24일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한 상태여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조위는 11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일위원회를 열어 ‘3차 청문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했다.

3차 청문회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고 당시 세월호에 실린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KBS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청문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주제별로 구체적인 청문대상 안건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조위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세월호 침몰 원인, 탑승자 구조 과정 등을 놓고 청문회를 연데 이어 3차 청문회를 추진키로 한 것은 정부가 6월 말 조사활동을 끝냈으며 예산 지급을 중단했지만 내년 2월까지 조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 해양수산부나 해경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경우 정상적인 청문회를 기대할 수는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나향욱(가운데)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른쪽은 이영 차관. 연합뉴스

야권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시켜야”

나 기획관 국회 교문위 출석 “부적절 발언 죄송”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말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나 기획관은 이어 “그 기사에 나온 말대로 제가 그런 뜻에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어쨌든 제 불찰로 인한 일이고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되고 또 국민들께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나 기획관은 “제 본심이 아니라 영화에 나온 말을 한 것”이라며 “과음을 하고 과로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교문위 전체회의는 나 정책기획관의 출석을 기다리기 위해 3시간여간 파행을 겪었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저녁 서울 종로区的 음식점에서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야권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개, 돼지라고 했던 분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느냐. 길게 말씀드리기도 민망하다”며 “이런 분들은 공직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진원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들이 개,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막말을 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 더민주 탈당

징계 결정 하루 앞두고 탈당계

‘가족 채용’ 논란을 불렀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1일 자진 탈당했다.

서 의원은 이날 낮 12시10분께 더민주 서울시당에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의 징계를 결정할 당 윤리심판원의 12일 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으며 대신 윤리심판원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각하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를 통해 “시기가 많이 늦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 양해 부탁드리며 분골쇄신하겠다. 철저히 반성하겠다.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저는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자신의 남동생을 5급 비서관,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은 물론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해 월급을 주는 등 가족 채용 논란이 잇따라 제

기됐고, 이에 당무감사원이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을 권고해 왔다.

이처럼 서 의원이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착수되기 전에 탈당함에 따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1년 후에 복당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민주 당헌·당규상 탈당한 자는 1년, 징계 중인 자가 탈당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복당을 할 수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윤리규범 및 당규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친족의 범위를 민법 규정의 범위로 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인척까지다. 더민주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고 박광온 대변인이 서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더민주를 자진 탈당한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의원들의 ‘가족채용’ 문제에 대응한 조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안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임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